

STIMSON

38 NORTH

스팀슨센터 38노스 군사 실무단

북한의 “체커보드” 위협

한미동맹에의 걸림돌이자 기회

Clint Work and Natalia Slavney
2022년 3월

저자 소개

Clint Work 연구원은 스티imson 센터 산하 38노스 프로그램의 연구원입니다. 스티imson 센터에 합류하기 전에는 한국에 소재한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조교수로서 외교전문매체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한국섹션 칼럼란에서 정기적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기고하셨습니다. 워싱턴대 국제관계학 박사, 시카고대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한반도, 한미관계, 동아시아, 미국의 대외정책 등이 있습니다. Work연구원은 스티imson 센터에서 재직하면서 미 상원 의원들이 주를 이루는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the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을 포함한 미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평화문제를 다루는 모임들을 조직하고 주관했습니다. 그외에도 전국적으로 대학교와 공공단체, 그리고 지역단체들과 협업해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을 증진하는데 힘썼습니다. 현재 Work연구원은 냉전시기 이후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역사 및 변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ork연구원은 전문연구지 외에도 워싱턴포스트지(Washington Post),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더 디플로맷,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38노스, Sino-NK 저널 등 여러 언론매체에 글을 기고했으며, 미국 및 해외 언론매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비평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Natalia Slavney 연구원은 스티imson 센터 보조연구원이자 북한에 대한 정책분석 및 기술분석을 다루는 38노스 웹사이트에서 보조 에디터를 맡고 있습니다. Slavney 연구원은 스티imson 센터에 합류하기 전에는 존스홉킨스 대 SAIS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보조연구원 직책을 맡았습니다. 위스콘신 매디슨대에서 인류학, 아시아학, 국제관계학 학사학위를, 존스홉킨스 SAIS국제관계대학원에서 국제관계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38노스는 스티imson 센터 산하 조직으로서 혁신적인 연구와 사실에 기초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정책담론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8노스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의 전략적 계산과 대외접근방식에 연관된 내용을 주제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알리고 토의할 수 있는 플랫폼(38North.org)를 운영해왔습니다.

스티imson 센터는 응용연구와 독립적인 분석, 심층적인 접근과 정책혁신을 통해 국제안보, 공동의 번영과 정의를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스티imson 센터는 시급한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는 일에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스티imson 센터는 냉전의 여명기에 발족된 싱크탱크 사업으로서 불확실성에 마주한 세계속에서 안정과 안보를 향한 새로운 실용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개척해왔습니다. 스티imson센터는 오늘날 국제정세 변화와 기술 발전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분석을 내놓고, 전세계의 안보, 번영, 그리고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stimson.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크레딧: iStock.com/cmannyphoto, all rights reserved.

목차

개요.....	5
배경상황: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발전과 “체커보드” 위협	7
기존 가정과 공세종말점의 재정의	8
전략적 전환과 전시작전통제권.....	11
민-군 간 계획 및 정책 연계, 일상적 차원의 “연합성” 구축”	15
사이버 위협과 억제.....	18
고정인프라 취약점 해결.....	21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 통합	23
역내 및 지정학적 고려사항	25
맺음말.....	27
감사의 글	28
부록: 건의사항	29

북한의 “체커보드” 위협: 한미 동맹의 걸림돌과 기회

Clint Work 연구원, Natalia Slavney 연구원

2022년 3월

개요

2020년 10월 그리고 2021년 1월에 진행된 열병식에서 북한은 상당한 성과를 내보였다. 이와 근래 정체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상황에 입각해 스티븐 센터 산하의 38노스는 군사 실무단을 편성해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하고 한미동맹에 건의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2021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38노스는 협력단체인 주한미군전우회(KDVA)의 조력을 받아 한미 양국 국방분야의 전 관료출신 인원, 전문가, 학자들을 불러모았다.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및 이사장이자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예)의 주최 하에 개최된 해당 실무회의는 38노스 연구원 Clint Work박사가 38노스 연구원 Natalia Slavney와 Iliana Ragnone의 보조를 받아 회의를 조율하고 진행했다.

몇 주에 걸쳐 국제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이었지만, 보다 큰 시사를 했던 것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전력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재래식 군사장비, 통신장비, 화기에서 수많은 개선사항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력이 성장하고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현황과는 별개로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무단은 북한의 재래식능력이 근 미래에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저위험, 중간 위험, 고위험으로 나눠 토의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실무단은 북한발 위협이 “체커보드”처럼 일부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훨씬 급작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다는 견해에 이르렀다.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실무단은 한미동맹이 지금 취해야 할 조치와 북한의 능력

발달과 체커보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조치를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건의사항들은 실무단이 진행한 회의들에서 도출되었다:

- 동맹이 북한발 체커보드 위협에 적절한 조직 편성, 장비편제, 훈련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와 역내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한미동맹이 기존의 작전수행 방식을 변화해야 함을 고려해 볼 것.
- 한미동맹의 군사 및 민간 인프라를 전략 인프라로 고려할 것, 가급적 고정 인프라에의 의존을 줄이고, 불가할 시, 해당 고정 인프라의 방어를 강화하고 견고화할 것.
- 방어계획을 위기관리와 통합하는 범정부적 접근을 취해, 핵심 인프라를 각종 섹터 별로 바꿔가면서 연습을 시행할 것.
- 한미 연합사단과 연합사 본부 차원에서 “연합력”을 더욱 강화해, 한미동맹이 상시 한미간 협조와 연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동맹을 목표로 할 것.
- 아축의 약점을 드러내는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실패하는 것을 목표로(train to failure)” 군사훈련연습의 방향성을 바꾼다. 그리고 드러난 약점을 한미 각 지휘체계와 연합사의 한미국가통수기구로 보고한다.
- 방공 및 미사일방어 체계의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는 대신, 방공 및 미사일방어 체계 간 협조를 강화하고, 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하고, 통합운용 방식을 예행연습한다.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같은 주요 사안들에 대해 한미 대통령 및 내각급 관료들까지 포함해 언론, 정부, 정치계 지도자들에 원활하게 전파할 수 있는SC(전략적소통)계획을 구상한다.
- 한국과 미국 각자의 국익 및 권한과 동맹으로서의 이익 및 작전간에 존재하는 주요 차이점들을 식별해 정보공유 및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한미 각국의 사이버작전에서 권한 및 관할 상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배경상황: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발전과 “체커보드” 위협

북한은 2020년 10월 그리고 2021년 1월 열병식에서 발전된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체계를 선보이면서 많은 한미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국방안보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때 선보인 신형 무기들과 정체된 북-미, 남북관계로 인해 스티븐 38노스 실무단은 북한의 재래식능력이 향후 근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저위험, 중간 위험, 고위험 세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저위험 시나리오에서는 북한군의 능력은 비교적 정체된 상태로, 보다 효과적인 무력시위와 제한적 도발을 가능하게 할 재래식 전력의 평범한 수준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 실무단은 한미동맹의 사이버 방어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능력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다.

중간 위험 시나리오에서 일부 북한군 능력이 타 전력 대비 질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였다. 북한군은 보다 높은 살상력을 보유할 것이며, 일부 부대 운용을 통한 제한적 공세작전, 그리고 방어작전에 특화된 능력들을 개선할 것이다. 실무단은 동맹이 전구급 미사일요격, 무인기 요격 능력을 우선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는 탐지, 능동적 및 피동적 방어, 북한의 재래식 타격능력을 와해 또는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이 포함되었다.

고위험 시나리오에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은 전반에 걸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이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재래식 전력이 보다 정밀하고 치명적인 고강도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했다. 또한 방어 작전시에 고가치 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 실무단은 제한적 공격에 대한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력을 강화하고 전시에 신속하게 북한의 방어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보다 포괄적인 전력 발전 계획을 제안했다.

회의 진행 초기에 실무단은 진작부터 동맹이 실질적으로 체커보드 위협에 마주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체커보드 위협이란 북한의 일부 능력이 저조한 수준에서 머무는 반면 일부 능력이 중간 수준의 위협으로 발전하고, 나머지 일부 능력은 높은 수준의 위협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북한의 능력이 제각기 다른 속도로 발전할 것임을 가정하고, 한미동맹이 맞닥뜨릴 도전과제를 토의함과 동시에 머지않아 나타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건의하고자 한다.

기존 가정과 공세종말점의 재정의

실무단 직원들은 저위험 시나리오가 “최선”이고 고위험 시나리오가 “최악”의 상황일 거라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회피하려 했다. 대신 시나리오를 다룰 때 북한이 저성능의 (low-end) 능력을 활용해 고성능(high-end)의 효과를 내고 동맹 방어체계의 취약성을 노출시킬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 논리에 반대되는 판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일부 측면에서 볼 때, 실무단은 북한의 현대화와 지속지원능력 미비가 각기 전시 악조건 하에서 능력을 강화하고 무력분쟁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갈등이 확대되도록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단 직원들은 북한이 손쉽게 한국 전역의 고정표적의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커보드 시나리오가 별개의 도전과제를 제기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고정표적은 구글 어스와 같은 공개사용가능한 도구들을 활용해 손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동맹이 공유하는 타격의 정밀성을 추구하고 민간인 표적화를 지양하는 가치관목표 등에서 자유롭다. 북한 민간인 살상문제가 동맹의 저해요소가 된다면, 타 분쟁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원형공산오차(CEP)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타격 무기체계 및 탄약 부족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실무단은 또한 “전쟁 초기”, 즉 최초의 전투상황 또는 DMZ와 DMZ인근에서의 도발상황에 따라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이 각기 다른 방식에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동맹의 역공격에 대한 북한의 자체방어 동맹의 지휘체계가 체커보드 위협을 고려할 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체커보드 위협을 아무런 맥락 없이 고려해서는 안되며, “초기 전장 상황”에 따라 체커보드 위협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맥락 없이 적 전투서열과 아축 전투서열을 비교하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전력(linear force capability) 판단방식은 전황판단, 민간피해, 요망 전략적 결과에 잘못된 가정과 오판을 유발할 것이다.

실무단은 동맹과 한국이 북한의 공중 및 해상 영역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동전에서 북한 전력을 표적화할 수 있을 것임을 인정했지만, 북한은 동맹이 훈련/대비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투를 전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을 방어하는 것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북한은 사이버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작군부대 중심투입과 더불어 대량생산되는 기성품 무인기(드론)와 무인기체계를 활용해 아축의 표적화와 방공체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동맹은 정밀무기 탄약의 빠른 고갈과 분산되어 혼잡한 전장상황에 대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게 되는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무단 중 일부는 무인기 위협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기술적 해결방안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들조차도 포화되어 혼잡한 전장환경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무단 중 다른 일부는 북한의 지휘통제능력이 경직되어 유연하지 못하며, 북한의 군수지속지원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은 작전 개시 수주 전부터 일정을 결정해 특정 시점에 작전을 개시하고 개별상황에 따른 조치들까지 사전에 계획해 임기응변 없이 전투에 나설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전장상황에서 이런 일정과 계획은 쉽게 변경된다. 이는 북한만이 아닌 동맹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며, 때문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방식에 대해 숙고할 필요성이 더해진다.

동일 맥락에서 실무단 중 한 일원은 북한 전력이 중앙지휘통제에서 단절될 경우 또는 원래의 계획이 예측하지 못한 전장상황으로 인해 북한 전력이 전장에서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하지 못하게 될 거란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일원은 북한의 취약한 지휘통제능력이 검증된 고전적인 방법들에 의존해왔고 이를 개량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했다. 다른 일원들은 북한의 포병화력이 공세에 나선 야전부대를 지원하거나 수도권에 대한 비대칭적 타격을 할 시에 동시적인 집중포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날아오는 포탄 하나하나를 방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북한이 자체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그 이유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정했다.

동맹이 북한의 전력구조, 전투태세, 그리고 전투 개시 이전에 내려지는 지휘통제 결정을 판단하려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로, 한 일원은 DMZ사이에서 양측의 전력이동이 없을 경우,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해 수도권에 대한 방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정부체계에 위기를 만들고 동맹간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는 북한이 한국 영토를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포병전력의 일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고 동맹의 무기체계가 일으킨 살육파괴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주목시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적대행위의 중단을 종용할 수 있다.

건의사항:

- 저성과 고성능 전력을 아우르는 북한발 체커보드 위협과 전시의 다양한 유형과 단계에 동맹이 적절한 조직 편성, 장비편제, 훈련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 볼 것.
- 모든 영역의 작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의 C4I 체계의 제한점들을 해결한다. 이는 분대단위 무전과 같은 저성능 기술능력의 적절한 보급과

성능유지를 포함한다.

- 이스라엘이 혼잡한 전장상황에서 핵심인프라 방호를 위해 취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국이 자체개발을 결정한 아이언돔은 모든 발사체를 저지하지 못할뿐더러 기동성(궤도조정이 가능한) 탄두를 요격할 수 없지만, 특정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점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포병사격 포대는 아이언돔 체계와 연계해 포병사격에 대한 규잉과 표적지역 산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점방어와 연계해 [팰링스 무기체계](#)의 설계변화가 저고도 저속 발사체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국 무인기로부터의 정보전파능력을 개선하고 무인기와 사격결정 사이의 의사결정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선보인 규격화된 무인기와 무인기체계, 첨단 미사일전력 등 북한의 급격한 발전을 평가하고, 이러한 능력이 북한의 앞서간 사이버능력과 특작군부대 중심투입 등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려한다. 한미동맹이 민간인 보호에 대해 신경쓰는 것과 달리 북한은 민간인 살상을 개의치 않으며, 식수자원, 고속 교통체계, 전력체계에 대한 사이버 사보타주를 시행해 혼란을 야기하고 민간인 살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원자로 또한 표적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 북한의 보다 경직된 지휘통제와 제한된 군수능력을 고려해, 북한의 공세적 행위가 최대한 조속히 끝나고 군수적으로 유지불가능하게 해 북한이 여세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전술적 수준에서 공세적 기회를 모색하고 작전적 수준에서 공세적으로 사고하는 등의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전략적 전환과 전시작전통제권

실무단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용산기지 이전계획(YRP), 한국의 국방개혁, 미국의 전력태세 검토 및 (인도태평양)전구에서의 정책적 초점 변화와 전쟁 임무수행 개념 변화 등을 포함하는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전환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검토했다.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변화에 대한 노력은 동맹 지휘체계가 조직내의 집중력을 상당히 소모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줄어든 시간, 집중력과 에너지, 군사연습훈련 취소 및 규모 축소로 인해 한미연합사의 현행작전유지와 현행작전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전작권 전환 노력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의 정의와 달성효과에 대해 동맹의 지휘체계 내에서 수많은 혼란과 의견의 불일치를 낳았다.

실무단 직원들은 이러한 혼란과 의견의 불일치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을 전작권 전환 시도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찾았다. 계획은 전략적 전환계획(STP)에서 전략동맹 2015(SA-2015 Plan),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로 발전했으나, 동맹의 계획이 발전하면서, 특히 동맹이 두 개의 분리된 병렬지휘구조에서 단일 통합 사령부로 복귀하는 등의 중대한 변화를 겪은 이후로는 완전한 재정립이 이뤄지지 않았다.¹ 하지만, 동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일부 개념과 계획 등을 여전히 남겨두기도 했다.

실무단 직원들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심각한 의견대립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군 내부에서 그리고 정부, 정계 차원에서의 소통과 대화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 핵심적이다. 그럼에도 이런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한국의 군사주권의 문제로 치환하거나 전환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거나 유엔사(UNC)를 한미연합사의 통제하에 유지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속임수가 담겨있다고 여기는 등의 맥락을 벗어난 정치적 사안으로 변모해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동맹이 2000년대 초 전작권 전환의 첫 개념화 작업을 시작한이후로 실질적인 진전이 전무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양국 정부차원에서의 일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양국 정상 또는 정상에 준하는 수준에서 동맹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미 양 정권과 두 국가안보행정부 수준에서의 합의가 없다면, 한미동맹은 결코 현재의 혼란과 의견불일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¹ 전작권 전환은 원래 2006년 전략적 전환 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하에서 진행되어 2009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미루어졌었다. 이후 전략동맹 2015(SA-2015 Plan) 계획에 따라 2015년을 기점으로 개시될 예정이었다. 2015년 전환시기보다 전환조건에 기초한 접근을 따르면서 현행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이 채택되었다.

몇몇 일원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상정된 조건들이 비현실적이거나 심각하게 주관적이라고 평했다. 예를 들어, 전환의 조건 중 하나는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유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전제하는 포괄적인 모호성으로 인해 미중관계나 북한의 핵무기 현황까지도 고려범주에 넣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6.25전쟁 종전 선언이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종전선언의 추진을 가속화하려 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는 이상 핵 미보유국이 핵 보유국을 이끄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또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에 포함될 수 있어, 해당 조건의 충족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본다. 또한, 전작권 전환의 다른 조건들과 하부조건들을 판단하는 것은 평가기준과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영역의 문제가 된다.

또한, 실무단 일원들은 한국 군이 한반도를 넘어선 역할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한국군 장성들의 합동연합 다국적군 작전을 지휘할 역량의 보유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핵무기 미보유국의 장성이 전략적 자산들이 투입되는 전쟁에서 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갈등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일원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측 전략자산의 사용과 사용하게 될 경우 가용한 최선의 대비책에 대해 한미동맹이 협조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무단 일원들은 한미연합사와 한미연합사단 수준간의 연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한국합참과 한미연합사 간에 평상시에도 보다 일관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런 관계는 연합연습과 전시에만 이루어지나, 한국 합참의장이 보유한 평시 작전통제권에 해당되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일일작전의 운영방식에까지 이런 관계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국민들에게 어째서 한국의 4성장군이 미군을 지휘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해당 문제가 정치화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무단은 전작권 전환이 동맹 양국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책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포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에 동의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조건들을 폐기하거나 전작권 전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리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무단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했다. “미국인이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였다. “한국 장성이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였다. 실무단은 한국의 향후 능력 발전이 미국이 주도하는 현행 연합사에서와 같지 않을 거라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실무단은 한국이 주도를 맡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한국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이 함께 지킬 경우 한국에게 더 유리할 확률이 높다.”였다. 실무단은 예전에 논의되기도 했었던 양국의 군을 완전히 분리하는 안에 대해 토의했는데, 이 경우 미국은 보조역할만 맡게 되는데, 한국이 자국수호를 하기가 쉬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양국의 군을 분리할 경우 북한이 한국군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건의사항:

- 연합사 유지와 현행작전 및 대비태세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연관된 미래 지향적 노력을 동시에 지속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지속한다. 이는 주한미군사와 한국 합참, 그리고 한미동맹을 대변하는 한미연합사 간의 역할과 책임관계를 정밀하게 다듬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용산기지 이전계획(YRP)로 인해 미측과 한국 합참 측 상대부서들이 떨어지게 되어 문화교류와 군사 작전 차원의 이해를 저해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한미 간의 이런 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해 연락관계를 강화하고 기타 미측의 존재감을 늘리는 방안들을 재고려한다.
- 언론, 국민, 정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소통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는 한미 양국 대통령과 내각 관료들에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것도 포함시킨다.
- 한국 합참 예하의 평시 전작권이란 개념에서 작전사령부로 바꾸고, 합참의 역할을 격상시킨다.
- 리더 육성을 강화한다. 연합사 부사령관과 미측 지휘계통(미 국방부, 미 대통령까지) 간의 협력과 소통을 증대시킨다. 미래연합사의 한국 지휘관들은 미 국방부와 미 대통령을 포함한 미측 지휘계통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협력은 한측 장성들이 미래연합사의 두번째(미측) 지휘계통에 적응하게 도울 것이고, 책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이다. 미측 관계자들 또한 한측 장성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전작권이 향후에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리더십 양성의 일환으로 한미 지휘부를 대상으로 한국에 특화된 전략 위계임 시행 교육을 만든다.
- 전작권 전환 전 한측이 지휘를 맡게 될 때 일단 한국군 장성을 공동지휘관으로서 현행 연합사령관의 옆에서 부사령관으로 앉힌다. 이를 통해 한국군 장성과

미측 지휘계통간의 교류를 증대하고 일상적인 관계형성과 국가통수기구 간 지휘연계를 위한 절차를 발전시킨다.

- 한미 양 장성이 나란히 앉게 함으로써 양측간의 파트너십과 한국이 지휘를 맡게 되었을 때를 위한 대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지휘통제 체계를 사용하도록 한국이 자체 시스템을 포기하고 미국의 시스템과 호환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한미연합사에서 영어를 공용표준어로 지정하고 한국이 철저히 방어적인 태세로부터 벗어나게끔 권장한다.
- 한국이 연합합동 전투수행을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방안을 시도한다. 한국군이 통제구조,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시키고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 한국군이 여러 합동기능을 주관하는 연합사 구조를 만든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동맹은 한국을 주권국가로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종결시킬 능력과 지휘통제를 보유하게끔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민-군 간 계획 및 정책 연계, 일상적 차원의 “연합성” 구축

실무단 직원들은 동맹이 한반도 전투환경 전체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수도권 방어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한국정부의 위기계획의 우선설정은 물자, 장비, 인력을 북쪽으로 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군수인프라의 완전한 동원, 국유화, 우선순위 설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는 소프트 타겟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노출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북한이 상당한 규모로 특작군 부대 침투를 시행할 시 유연하게 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더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실무단 직원들은 연합연습훈련을 지난 몇 년간 계속해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비태세와 조직차원의 지식수준(institutional knowledge)을 저하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합연습에서의 임무달성 및 성공이 실제 현실과 민간에서 발생가능한 피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주었고, 때문에 연습에 대한 잘못된 낙관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를 지적했다. 현행 연습훈련의 문제점은 일부는 정치와 정책에 기인했으며, 군 지휘부는 연습훈련의 문제점들을 인정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무단은 연합연습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연습의 문제점들이 보다 상위 차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동의했다.

실무단은 한국이 NEO(비전투원 후송작전) 지원을 포함한 위기관리연습을 2년째 시행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조직차원의 지식(institutional knowledge)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했다. 직원들은 한국정부가 종종 미국이 단독행동을 취할 것을 우려하는 것과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없음에도 한국정부가 미 정부와 미군의 의사결정절차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연습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실무단은 동맹 내에서 연합성 제고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단, 연합특수전부대, 연합군사령부가 있음에도 여전히 다른 수준에서 그리고 일상적 차원에서는 연합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한 직원은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민-군 간의 연합성을 새롭게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력운용지침(GEF, Guidance for Employment of the Force)와 합동군사전략능력계획(JSCP, Joint Strategic Capabilities Plan) 예시로 들었다. 전자는 무엇을 증진할 것인지, 후자는 해당되는 무엇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가정과 최종상태에 대한 한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무단은 연습훈련에서 임무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사용해 실패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 중 하나라고 동의했다. 이는 가정들에 의문을 던지고 한반도 방어에 대한 작전계획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오며 동맹이 원하는 평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연습에 대한 접근방식의 정신적 변화는 다른 노력선과 함께 동맹이 현재의 전쟁계획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실무단은 이를 달성하려면 동맹의 지휘부에서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건의사항:

- 인프라의 취약성과 북한 특작군부대의 중심투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방어계획을 민간 위기관리연습과 통합해 기초부터 다진다. 동맹은 한강 이북과 이남 전부에 걸친 각종 다양한 핵심인프라를 시험하는 연습훈련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맹이 연습훈련을 어느 곳에 더 집중시켜야 할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한미 교리를 더 잘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한 연합전투교리발전사령부 창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연습훈련에서 실패를 목표로 한다. 군사연습훈련은 핵심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필요시 동맹이 방어할 섹터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시행할 것. 이런 훈련은 한미연합군, 군과 정부, 한미 정부간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성을 필요로 하며, 훈련을 통해 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전투원 후송작전 훈련과 기타 위기관리연습에 한국정부의 관여도를 높여 미국 정부와 미군의 의사결정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만들고, 위기관리가 단순히 전쟁에 나서는 것만이 아닌 평화유지를 위해 상황관리를 하는 것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 한미 연합사단과 연합사 본부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한다. 동맹이 예하의 구성군 차원에서조차도 더욱 지속적이고 협조가 잘 이뤄지는 연합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합 지휘통제 구조를 구성군 수준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통해 군부대 및 사령부의 고정위치로 인해 생기는 취약점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7가지 전투작전의 모든 영역(첩보, 이동 및 기동, 화력, 정보, 방호, 지속지원, 지휘통제)에 걸쳐 연합군 구조와 연합작전에서의 역할 공유를 더욱 강화하도록 양국의 노력을 더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어, 연합사단과 연합특수전부대를 더욱 강화해 통합된 연합공중작전, 보다 통합된 합동지휘통제 체계를 만든다. 이처럼 대비태세를 위해서는 통합 강화와 다영역 능력에 대한 집중이 요구된다.

- 저수준에서부터 한미간의 협조와 연합성을 더욱 증대시켜, 고정표적의 취약성을 완화한다. 여러 조치들 중에서도 동맹은 특히 연합전투교리발전사령부를 창설해 각자의 교리를 통합하고 전투작전의 모든 부분에서 전략적 수준과 그 이하 수준에서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사이버 위협과 억제

실무단은 북한의 사이버 영역 활동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논의했다. 북한은 사이버범죄와 사이버 첩보행위부터 민간체계 및 군체계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종류의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각종 사이버 위협마다 각기 다른 작동방식과 해결책 또는 대응책 등이 있다.

한 실무단 일원은 일반적으로 억제라는 단어가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억제는 핵무기 등의 가장 높은 전략적 수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반면, 사이버영역과 같은 낮은 전략수준에서 억제가 실패하는 일은 일반적이다. 다른 일원들은 사이버 영역에서의 억제가 본질적인 모호성으로 인해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다양한 범위의 악성 사이버 행위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럼에도, 실무단은 조기경보체계와 기타 C4ISR체계 공격 또는 핵심인프라를 공격하여 전략적 효과를 내고 살상을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이야말로 동맹이 억제와 방어를 효과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주요 사이버 위협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영역의 전략적 수준에서 억제하려면 한미 양국이 전략적 수준과 전략적 위협에 대한 정의에 합의해야 한다. 현재, 공적인 수준에서 그런 합의된 정의는 없다.

다른 일원들은 사이버 영역의 억제가 특수한 일부 케이스에만 적용되며 상호취약점과 상호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반도 사이버전장환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사이버영역에서 의존도와 취약성이 비교적 낮다. 동맹은 북한의 “실수” 또는 “오판”에 의한 사이버공격을 억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동맹이 사이버공격에 대해 더 유연한 대응을 취하고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후의 공격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뢰할만한 억제효과를 얻으려면 북한의 고가치 표적을 위협해야 하는 2차 타격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황이 급작스럽게 고조될 수 있다. 이런 위협의 경우에는 거부에 의한 억제와 보다 높은 회복탄력성 구축이 동맹의 사이버위협 대응에 또다른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단은 동맹간의 격차가 사이버위협에 대한 저항력과 대응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논의했다. 동맹은 각자 다른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는 지휘통제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양측의 네트워크가 완전한 상호호환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양국의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 가능지점들이 생기고 이는 악용가능한 취약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전시 이전의 사이버 활동 문제도 있다. 한국의 민간인프라나 심지어는 군표적까지도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는

한국의 국익과 사법권할권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사이버공격의 결과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표적이라도 이는 한미동맹의 관할에 놓이게 되고, 양국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무단의 한 일원은 동맹이 사이버 조치와 사이버 작전에 통합되지 않은 각자 분리된 접근을 취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느 정도의 협력과 협조는 존재하나, 연합 수준의 사이버 작전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일원은 몇 년전까지 동맹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유발되는 상황을 모사하는 연습을 시행했었지만, 협의와 시행에 쉽지않은 노력이 요구되었고,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일원은 동맹이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연합 사이버 작전과 연습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다.

다른 일원은 사이버 영역에서 특히, 그리고 통합억제라는 개념을 놓고 볼때, 평시와 전시 간에 구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전영역에 대한 억제 그리고 전영역에서의 안보 강화, 위험 완화, 위기고조 관리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맹은 이러한 개념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및 군 사이버안보 뿐만이 아니라 사이버영역에서의 작전 및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 각자가 각자의 개별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건의사항:

- 정보공유 및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한미 각국의 사이버작전에서 권한 및 관할 상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각국의 통제로 인해 양국 사이버 작전의 통합과 정례화(routinization)가 어렵겠지만,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익 및 권한과 동맹의 이익 및 작전이 양립할 수 없는 주요 지점들을 식별해야 한다.
- 전시 이전과 이후 북한의 민간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연습한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연습을 함으로써 동맹은 실제 상황 시 보다 일관적이고 효과적이며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 연습은 민간기관단체와의 방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을 미리 시도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 특정 시스템이 사용 불가해질 경우에 대한 훈련을 진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영역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목적을 위해 주요 네트워크 자산 및 통신체계가 임의로 차단되는 연습 또한 시행한다. 어느 특정 시스템이 작동불능이 될지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진행하여 역량과 준비태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요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선한다.
- 위기관리연습 또는 기존의 군사훈련에 민간 전문가와 정부관료들, 그리고 필요

시 민간기업들을 소집해 사이버영역에서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이해를 돕는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의 규정과 표준대응지침 발전을 시작한다.

- 한국 정부가 기 보유중인 인프라를 확인하고 인프라가 사이버 영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한다. 예로, 한국은 민간섹터에서 상당한 수준의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 복무 후 민간섹터에 종사하는 많은 수의 고등교육을 받은 예비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사이버영역 문제 해결에 맞춰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개편해 예비군 자원 활용방안과 훈련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무력갈등 이하 수준의 공세적 사이버 조치를 취할 시 미 사이버사령부 “persistent engagement(지속적 개입)”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채택한다. 이는 사이버 영역의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적과 교전하고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전략은 이를 통해 적에 장기적인 기회비용을 인상시켜 적의 적대적 사이버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억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 공세적 사이버 도구는 정밀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한다. 재래식 영역에서 하듯이 미국과 동맹의 사이버 활동을 북한과 사이버 영역에서 모의연습을 하려는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아축이 사용한 사이버 도구에 대해 적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자신들의 수단을 이에 발맞춰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인프라 취약점 해결

실무단은 한반도 전장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군사 및 민간 인프라가 동맹의 이익과 위기시 또는 전시에 동맹의 대응능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전략 인프라로 식별했다. 고정 인프라 방어에 있어 대규모 분쟁시 조기 징후경보는 현실성과 실용성이 떨어진다. 징후경보체계가 적 공격 발생 전 또는 조기에 일부 지역에서의 인원대피를 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맹이 점방어, 미사일방어, 무인기방어체계 같은 자산들을 연결된 형태로 보유한 게 아니라면 징후경보의 유용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고정 인프라 방어 문제는 북한이 고형연료를 포함한 첨단기술을 미사일체계 전반에 도입해 이동성을 향상시키게 되면 더욱 그 심각성이 커질 것이다.

한국군 내부에는 수도권 방어와 고정 방어진지 견고화에 대한 오래된 믿음이 있어왔다. 하지만 한국과 동맹은 전투에서 보다 높은 기동성을 갖춰야 하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대한 개념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회복탄력성과 기동성이 정적방어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북한군은 동맹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나, 전장을 복잡하게 어지럽히고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다. 탄도미사일 위협을 간과할 수도 없지만 동맹은 적 특작군부대의 직접적인 행동, 첨단 전자전 기술(예: blip enhancer-적 레이더 기만을 위해 레이더가 탐지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 가 장착된 소형 무인기), EMP 공격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집중 경계해야 할 것이다. 통신체계 및 민간인프라(예:상/하수도 등)가 현재 모두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저지선을 구축해야 한다.

건의사항:

- 가급적 고정 인프라에 대한 동맹의 의존도를 낮춘다.
- 고정 표적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민간 표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전력 그리드 변압기와 양수시설과 같은 고정 인프라 공급망 물자에 대해 전략예비를 비축해두는 방안 등이 있다. 모든 체계에서 어느 한 노드라도 백업체계가 미비해선 안된다.
- 미사일 방어, 대특작군 방어, 대무인기 방어, 점방어체계 최신화(예: 아이언 돔 [및 C-RAM 센츄리온](#) 전력)와 더불어 순항미사일과 회전식 다열기관포를 격추할 수 있는 해상 수단을 포함해 인프라 방어에 대해 보다 철저한 계획을 만든다.
- 물리 인프라 및 시설을 견고화(harden)한다. 현재 대다수 한국의 인프라 방어는 민간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상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필요 자산에 대해 백업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자산 및 시스템이 불가용해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강화한다.

- 한국 중심에 위치한 핵심 인프라의 방어를 연습한다. 이는 대특작군 전투를 포함한다. 한국군은 전시 민간 핵심 인프라가 북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후방 전선에 대한 훈련이 가장 부족한 상황이다.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 통합

실무단 일원들은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 통합의 경우, 말보다 실제 실천이 더욱 어렵고, 미국조차도 목표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지난 10년에 걸쳐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미 육군이 플러그-앤-플레이 식 시스템을 위한 오픈 아키텍처를 발전시켰지만,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과 합동작전 영역에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한미동맹의 방공 미사일방어 통합에는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문제점들이 있다. “동맹이 동일한 기술 아키텍처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한미의 각 시스템이 호환가능하다고 했을 때, 동맹이 데이터를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었는가?” “동맹의 체계는 기능적으로 상호운용가능한가?” 실무단은 이런 질문들이 하나도 빠짐 없이 검증되고 실천되며 정책에도 명시됨으로써 향후에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 일원은 한미 체계와 능력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맹이 최대한 통합을 시도하면서 완전할 순 없겠으나, 현실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간의 협조, 방어계획 설계, 다층적인 방공 미사일방어체계 설립과 조기경보데이터 공유와 같은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이다.

실무단은 또한 방공 미사일방어체계 통합을 군사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반면 이는 주권의 문제와도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한 주장들은 예를 들어, 한국이 자국의 방어 아키텍처에 포함된 킬체인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상황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군 현대화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치적 고려와 주권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인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패트리엇 미사일을 완전히 통합된 동맹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에 미포함시키는 것은 체계의 효율성을 제한시킨다. 실무단은 싸드(THAAD) 배치가 미국의 주권개입 우려를 낳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더라도 미국의 지휘부가 추구하는 체계통합과 한국의 주권에 대한 우려 간에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토의했다.

건의사항:

-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의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는 대신,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 간 협조를 강화하고, 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하고, 통합운용 방식을 예행연습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공역에 다양한 능력을 전개해 전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방공 미사일방어체계가 보다 다층적으로, 보다 높은 밀도로 전황을 반영하고 센서들이 다양한 종류의 무기체계들을 규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요소에 최고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의 여러 층들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방공 미사일방어 통합을 시도하기 전 주권과 관련된 문제와 우려사항들을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시에 미국은 보다 강압적으로 나서되, 개별적으로 이런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미국 국민의 생명과 한국 방어를 사이에 두고 저울질해야 하는 모순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역내 및 지정학적 고려사항

실무단은 체커보드 위협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면 보다 포괄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한반도에서 갈등관계의 균형점을 찾되 역내맥락에 근거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 발전에 대해 접근하려면 역내동학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무기체계는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한반도 지역을 넘어선 무력충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자체적으로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도발이나 침략을 감행해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동맹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공격하거나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단독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갈등관계에 놓인 국가들(예: 러시아 또는 중국)과 함께 협력해 한국군이나 미군을 한반도에 고정시키고 인도태평양 타 지역에 이들의 전개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이용해 미국이 한국에 집중된 틈을 타 대만에 대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

실무단은 또한 주한미군을 한국의 국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반도 외의 역내우발상황이나 위기상황에 대해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새로운 문제가 아님을 논의했다. 한미가 미군전력운용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2002년~2003년 당시에 했지만, 이는 여전히 까다롭고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어서, 향후에도 변경과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로 인해 생기는 불안정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예산 관련 문제, 미군의 해외 파병전개 변화, 미국 및 동맹에 대한 중국발 위협, 아태평양 역내 미군과 중국군 능력의 균형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 유연성은 현재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전투력은 역내 우발상황의 경우에는 제한적 가치만을 갖는다. 실무단 일원들은 또한 만약 미군이 역내 다른 우발상황에 투입될 경우 한국군이 빈 자리를 대신해야 할 것이므로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달성하려면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더욱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달리 말하자면 북한의 저성능 기술과 고차원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체커보드식 재래식 능력 발전은 한반도에서의 우발상황 또는 전쟁상황에 전술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미군전력이 한반도 외 지역에 전개된 후 다시 한반도로 재전개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공격도발시 신속한 재전개를 위한 항만과 비행장이 즉시가용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재래식능력 발전은 전략적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논외로 하더라도,

동맹간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의견불일치가 남아있다. 실무단 일원들은 이 문제가 동맹에 있어 가장 심각한 전략적 문제 중 하나라고 평했다.

건의사항:

-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에 노력을 더욱 증대하여 동맹과 적대세력이 그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 한반도에서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반도 내/외에서의 작전에 대한 전력전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미군 전력구조와 군수능력의 규모와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 한반도로 전개/이탈하는 전력의 전개에 사용되는 고정 인프라의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취약점을 해결하면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기존임무에 기여할 것이다.
- 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의 각종 북한의 재래식능력을 동원하는 체커보드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이 기회를 틈타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한반도 외에 전개된 미군 전력을 이용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화시킨다.

맺음말

한반도 내외의 전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2020년 및 2021년 열병식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선보였으며,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는 근래 정체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해 스티븐 센터 산하의 38노스는 군사 실무단을 편성했다. 실무단은 해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하고 한미동맹에 건의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실무단은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에는 북한의 재래식능력이 근 미래에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저위험, 중간 위험, 고위험으로 나눠 토의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실무단은 북한발 위협이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신형 장비를 전투력 발전에 반영하는 것은 광범위한 상호연관된 요인들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이는 설계, 생산제조능력, 자원 조달, 통합, 군수, 정책, 연습훈련, 그리고 지휘통제 커뮤니케이션 등 요인들의 제한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실무단은 이러한 북한의 제약을 안고 있지만, 동맹이 여전히 체커보드 위협으로 인해 여러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장애물들과 문제점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위협은 위기관리능력을 저해하고, 혼잡한 전장상황 속에서 동맹을 방어와 무력충돌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동맹의 억제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실무단은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심각한 의견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사안들에 대한 소통이 전무하거나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 정치화된 맥락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무단은 이러한 문제점과 장애물들을 기회로 식별했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건의사항들을 제안했다. 실무단은 한미 군 지휘부가 일부 기존 가정들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려한다면 동맹이 본 보고에서 식별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 지휘부는 향후 국가통수기구에 한미 각자의 시스템, 연습훈련 및 정책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해야 하고, 동시에 양국 공동협의절차를 통해 함께 연합으로서 보고해야 한다. 여러 주요 결정사안들은 북한의 증가하는 군사력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도록 국가통수기구가 한미동맹에 원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및 이사장이자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예)의 주최 하에 개최된 해당 실무회의는 38노스 연구원 Clint Work박사가 38노스 연구원 Natalia Slavney와 Iliana Ragnone의 보조를 받아 회의를 조율하고 진행했다. 38노스 부국장 Michelle Kae가 구상한 보고서를 토대로 38노스 국장 Jenny Town과 주한미군전우회 선임부회장(운영담당) Steve Lee 대령(예)가 편집을 도왔음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김도연, 주한미군전우회 선임 통번역사, 번역을 도왔다.

부록: 건의사항

기존 가정과 공세종말점의 재정의

건의사항:

- 저성과 고성능 전력을 아우르는 북한발 체커보드 위협과 전시의 다양한 유형과 단계에 동맹이 적절한 조직 편성, 장비편제, 훈련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 볼 것.
- 모든 영역의 작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의 C4I 체계의 제한점들을 해결한다. 이는 분대단위 무전과 같은 저성능 기술능력의 적절한 보급과 성능유지를 포함한다.
- 이스라엘이 혼잡한 전장상황에서 핵심인프라 방호를 위해 취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국이 자체개발을 결정한 아이언돔은 모든 발사체를 저지하지 못할뿐더러 기동성(궤도조정이 가능한) 탄두를 요격할 수 없지만, 특정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점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포병사격 포대는 아이언돔 체계와 연계해 포병사격에 대한 큐잉과 표적지역 산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점방어와 연계해 [팰링스 무기체계](#)의 설계변화가 저고도 저속 발사체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국 무인기로부터의 정보전파능력을 개선하고 무인기와 사격결정 사이의 의사결정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선보인 규격화된 무인기와 무인기체계, 첨단 미사일전력 등 북한의 급격한 발전을 평가하고, 이러한 능력이 북한의 앞서간 사이버능력과 특작군부대 중심투입 등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려한다. 한미동맹이 민간인 보호에 대해 신경쓰는 것과 달리 북한은 민간인 살상을 개의치 않으며, 식수자원, 고속 교통체계, 전력체계에 대한 사이버 사보타주를 시행해 혼란을 야기하고 민간인 살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원자로 또한 표적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 북한의 보다 경직된 지휘통제와 제한된 군수능력을 고려해, 북한의 공세적 행위가 최대한 조속히 끝나고 군수적으로 유지불가능하게 해 북한이 여세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전술적 수준에서 공세적 기회를 모색하고 작전적 수준에서 공세적으로 사고하는 등의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전략적 전환과 전시작전통제권

건의사항:

- 연합사 유지와 현행작전 및 대비태세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연관된 미래 지향적 노력을 동시에 지속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지속한다. 이는 주한미군사와 한국 합참, 그리고 한미동맹을 대변하는 한미연합사 간의 역할과 책임관계를 정밀하게 다듬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용산기지 이전계획(YRP)로 인해 미측과 한국 합참 측 상대부서들이 떨어지게 되어 문화교류와 군사 작전 차원의 이해를 저해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한미 간의 이런 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해 연락관계를 강화하고 기타 미측의 존재감을 늘리는 방안들을 재고려한다.
- 언론, 국민, 정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소통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는 한미 양국 대통령과 내각 관료들에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것도 포함시킨다.
- 한국 합참 예하의 평시 전작권이란 개념에서 작전사령부로 바꾸고, 합참의 역할을 격상시킨다.
- 리더 육성을 강화한다. 연합사 부사령관과 미측 지휘계통(미 국방부, 미 대통령까지) 간의 협력과 소통을 증대시킨다. 미래연합사의 한국 지휘관들은 미 국방부와 미 대통령을 포함한 미측 지휘계통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협력은 한측 장성들이 미래연합사의 두번째(미측) 지휘계통에 적응하게 도울 것이고, 책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이다. 미측 관계자들 또한 한측 장성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전작권이 향후에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리더십 양성의 일환으로 한미 지휘부를 대상으로 한국에 특화된 전략 위게임 시행 교육을 만든다.
- 전작권 전환 전 한측이 지휘를 맡게 될 때 일단 한국군 장성을 공동지휘관으로서 현행 연합사령관의 옆에서 부사령관으로 앉힌다. 이를 통해 한국군 장성과 미측 지휘계통간의 교류를 증대하고 일상적인 관계형성과 국가통수기구 간 지휘연계를 위한 절차를 발전시킨다.
- 한미 양 장성이 나란히 앉게 함으로써 양측간의 파트너십과 한국이 지휘를 맡게 되었을 때를 위한 대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지휘통제 체계를 사용하도록 한국이 자체 시스템을 포기하고 미국의 시스템과 호환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한미연합사에서

영어를 공용표준어로 지정하고 한국이 철저히 방어적인 태세로부터 벗어나게끔 권장한다.

- 한국이 연합합동 전투수행을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방안을 시도한다. 한국군이 통제구조,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시키고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 한국군이 여러 합동기능을 주관하는 연합사 구조를 만든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동맹은 한국을 주권국가로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종결시킬 능력과 지휘통제를 보유하게끔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민-군 간 계획 및 정책 연계, 일상적 차원의 “연합성” 구축

건의사항:

- 인프라의 취약성과 북한 특작군부대의 중심투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방어계획을 민간 위기관리연습과 통합해 기초부터 다진다. 동맹은 한강 이북과 이남 전부에 걸친 각종 다양한 핵심인프라를 시험하는 연습훈련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맹이 연습훈련을 어느 곳에 더 집중시켜야 할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한미 교리를 더 잘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한 연합전투교리발전사령부 창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연습훈련에서 실패를 목표로 한다. 군사연습훈련은 핵심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필요시 동맹이 방어할 섹터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시행할 것. 이런 훈련은 한미연합군, 군과 정부, 한미 정부간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성을 필요로 하며, 훈련을 통해 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전투원 후송작전 훈련과 기타 위기관리연습에 한국정부의 관여도를 높여 미국 정부와 미군의 의사결정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만들고, 위기관리가 단순히 전쟁에 나서는 것만이 아닌 평화유지를 위해 상황관리를 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 한미 연합사단과 연합사 본부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한다. 동맹이 예하의 구성군 수준에서조차도 더욱 지속적이고 협조가 잘 이뤄지는 연합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합 지휘통제 구조를 구성군 수준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통해 군부대 및 사령부의 고정위치로 인해 생기는 취약점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7가지 전투작전의 모든 영역(첩보, 이동 및 기동, 화력, 정보, 방호, 지속지원, 지휘통제)에 걸쳐 연합군 구조와 연합작전에서의 역할 공유를 더욱 강화하도록 양국의 노력을 더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어, 연합사단과 연합특수전부대를 더욱 강화해 통합된 연합공중작전, 보다 통합된 합동지휘통제 체계를 만든다. 이처럼 대비태세를 위해서는 통합 강화와 다영역 능력에 대한 집중이 요구된다.
- 저수준에서부터 한미간의 협조와 연합성을 더욱 증대시켜, 고정표적의 취약성을 완화한다. 여러 조치들 중에서도 동맹은 특히 연합전투교리발전사령부를 창설해 각자의 교리를 통합하고 전투작전의 모든 부분에서 전략적 수준과 그 이하 수준에서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사이버 위협과 억제

건의사항:

- 한국과 미국 각자로서의 국익 및 권한과 동맹으로서의 이익 및 작전간에 존재하는 주요 차이점들을 식별해 정보공유 및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한미 각국의 사이버작전에서 권한 및 관할 상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각국의 통제로 인해 양국 사이버 작전의 통합과 정례화(routinization)가 어렵겠지만,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익 및 권한과 동맹의 이익 및 작전이 양립할 수 없는 주요 지점들을 식별해야 한다.
- 북한이 전시 이전과 이후에 민간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연습한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연습을 함으로써 동맹은 실제 상황 시 보다 일관적이고 효과적이며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 연습은 민간기관단체와의 방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을 미리 시도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 특정 시스템이 사용 불가해질 경우에 대한 훈련을 진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영역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목적을 위해 주요 네트워크 자산 및 통신체계가 임의로 차단되는 연습 또한 시행한다. 어느 특정 시스템이 작동불능이 될지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진행하여 역량과 준비태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요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선한다.
- 위기관리연습 또는 기존의 군사훈련에 민간 전문가와 정부관료들, 그리고 필요 시 민간기업들을 소집해 사이버영역에서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이해를 돕는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의 규정과 표준대응지침 발전을 시작한다.
- 한국 정부가 기 보유중인 인프라를 확인하고 인프라가 사이버 영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한다. 예로, 한국은 민간섹터에서 상당한 수준의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 복무 후 민간섹터에 종사하는 많은 수의 고등교육을 받은 예비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사이버영역 문제 해결에 맞춰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개편해 예비군 자원 활용방안과 훈련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무력갈등 이하 수준의 공세적 사이버 조치를 취할 시 미 사이버사령부 “persistent engagement(지속적 개입)”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채택한다. 이는 사이버 영역의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적과 교전하고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전략은 이를 통해 적에 장기적인 기회비용을 인상시켜 적의 적대적 사이버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억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 공세적 사이버 도구는 정밀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한다. 재래식 영역에서 하듯이 미국과 동맹의 사이버 활동을 북한과 사이버 영역에서 모의연습을 하려는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아축이 사용한 사이버 도구에 대해 적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자신들의 수단을 이에 발맞춰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 인프라 취약점 해결

건의사항:

- 가급적 고정 인프라에 대한 동맹의 의존도를 낮춘다
- 고정 표적의 취약점을 낮추고 민간 표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전력 그리드 변압기와 양수시설과 같은 고정 인프라 공급망 물자에 대해 전략예비를 비축해두는 방안 등이 있다.
- 미사일 방어, 대특작군 방어, 대무인기 방어, 점방어체계 최신화(예: 아이언 돔 및 [추가적인 C-RAM 센츄리온](#) 전력)와 더불어 순항미사일과 회전식 다열기관포를 격추할 수 있는 해상 수단을 포함해 인프라 방어에 보다 철저한 계획을 만든다.
- 물리 인프라 및 시설을 견고화(harden)한다. 현재 대다수 한국의 인프라의 방어는 민간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상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필요 자산에 대해 백업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자산 및 시스템이 불가용해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강화한다.
- 한국 중심에 위치한 핵심 인프라의 방어를 연습한다. 이는 대특작군 전투를 포함한다. 한국군은 전시 민간 핵심 인프라가 북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후방 전선에 대한 훈련이 가장 부족한 상황이다.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 통합

건의사항:

-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의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는 대신,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 간 협조를 강화하고, 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하고, 통합운용 방식을 예행연습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공역에 다양한 능력을 전개해 전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방공 미사일방어체계가 보다 다층적으로, 보다 높은 밀도로 전황을 반영하고 센서들이 다양한 종류의 무기체계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요소에 최고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공 미사일방어 체계의 여러 층들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방공 미사일방어 통합을 시도하기 전 주권과 관련된 문제와 우려사항들을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시에 미국은 보다 강압적으로 나서되, 개별적으로 이런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미국 국민의 생명과 한국 방어를 사이에 두고 저울질해야 하는 모순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역내 및 지정학적 고려사항

건의사항:

-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에 노력을 더욱 증대하여 동맹과 적대세력이 그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 한반도에서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반도 내/외에서의 작전에 대한 전력전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미군 전력구조와 군수능력의 규모와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 한반도로 전개/이탈하는 전력의 전개에 사용되는 고정 인프라의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취약점을 해결하면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기존임무에 기여할 것이다.
- 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의 각종 북한의 재래식능력을 동원하는 체커보드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이 기회를 틈타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한반도 외에 전개된 미군 전력을 이용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화시킨다.